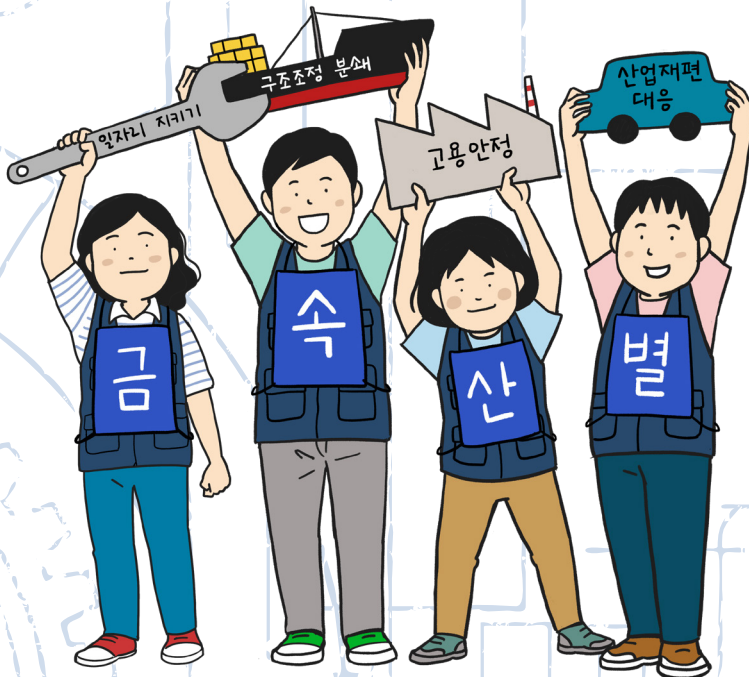


**총고용 보장 쟁취!**  
**코로나 위기, 구조조정**  
**거센 파도를 함께 넘자!**

# 금속노조 2020년 투쟁 설명서

- ✓ 11기 1년차 사업계획
- ✓ 2020년 임단협 요구



#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



감염병 위기에서  
실업대란으로 전환 조심 ...

정부와 자본,  
경제활력 제고 내세워  
노동에 대한 공격 ...

닥쳐오는 위기 끝장내려면

✓ 모든 해고 금지 · 사회안전망 강화  
사회적 투쟁

✓ 2020년 임금단체교섭 투쟁

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!



# 노동 주도 코로나 19 위기극복

첫 번째 계획

01 모든 해고 금지 · 사회안전망 확대 · 노동3권 보장 쟁취

02 투쟁태세 및 사회연대전선 구축

- 5월 전국 확대간부 상경투쟁 → 7월 18만 시기 집중 총파업
- 「코로나 위기 악용」 경총 해체
-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전가 저지

## 안전하게 일할 권리!

## 노조할 권리 쟁취! 비정규직 철폐!

두 번째 계획

01 노동개악 저지 · 노조파괴법 분쇄 총파업

02 노조할 권리 보장! 조건 없는 ILO협약 즉각 비준

-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·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,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
-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· 노조파괴 저지
- 모든 노동자 총고용 보장!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
- 노조파괴 · 복수노조 · 장기투쟁 · 외투사업장 문제 해결

## 재벌체제 개혁! 구조조정 저지! 산업정책 개입 강화!

세 번째 계획

01 재벌 책임요구 · 재벌체제 개혁

02 구조조정 대응체계 구축 · 고용보험제도 전면개편

03 「위기극복」 산업정책 마련 · 정부정책 개입강화

- 재벌 · 원청 책임 강화, 전국민 고용보험 · 긴급실업수당 도입 등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투쟁 전개
- 업종별 과제 해결방안 제시 등 정부 산업정책 개입

# 조직강화·확대사업

전 조직적인 조직확대 사업과  
산별노조 미래를 위한 준비



##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전 조직적인 **조직확대사업**

첫 번째 계획

### 01 제조업 및 관련 업종 노동자 적극 조직

- 전체 지부·사업장 미조직 담당 선임
- 공단 조직화 사업 전국적 확대
- 「복수노조 악용」 신규사업장 탄압 적극 대응

### 02 전략조직사업단 운영

- 청년·예비 노동자, 퇴직자 조직화 계획 마련

### 03 안정적 재정 확보

- 지역공동사업비 기준 다시 마련 → 지역별 조직화 사업 지원
- 노조 재정구조 진단 → 조합비 배분 비율 조정

## 지역중심

# 조직강화와 재정혁신

두 번째 계획

### 01 지역지부 활동 모델 마련

- 조직진단에 기초한 조직확대·지부교섭 강화·지역연대 모델

### 02 금속노조 재정구조 혁신

- 조합비 납부 기준 통일
- 신규 조합원 산별기금 납부방안

## 교육연수원 개원에 맞춘

# 산별교육시스템 구축

세 번째 계획

### 01 연수원 건립사업

- 교육연수원 운영규정 제정
- 간부 기본교육·심화교육 매뉴얼
- 간부 의무교육 이수 규정
- 「조합교육 시간」 단체협약 확보

### 02 간부육성사업

- 신규사업장, 신임 간부 교육
- 주제별·과정별 간부 교육
- 간부 소양교육 중심으로 재편

##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!

# 평화체제 구축!

## 반전·평화운동

네 번째 계획

### 0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조합원 실천사업

### 02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활성화 사업

### 03 일본 강제동원 사죄배상 국제연대

#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

- ① 노동쟁의 원칙
- ② 쟁의 중 시설이용
- ③ 노동쟁의와 신분보장
- ④ 신규채용 및  
대체근무 금지
- ⑤ 불이행 책임



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상 **단체행동권** 내용을 확대·강화하고, 「더 센 놈이 온다」 노조파괴법을 막기 위한 대정부·대국회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.

정부와 사용자단체는 ▲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▲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및 활동 차단 ▲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조합 무력화, 산별노조 죽이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.

특히 노동법 개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. 총선 이후 정부·거대양당과 사용자들이 힘

을 모아 노조파괴법 통과를 본격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런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, 노동쟁의 관련 단협 조항을 세부 내용 없이 「노조법에 따른다」로만 규정하고 있다.

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는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노사자치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,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하다.

노조법 개악되면 어쩌려고?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체협약이 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노조파괴를 막는다.

#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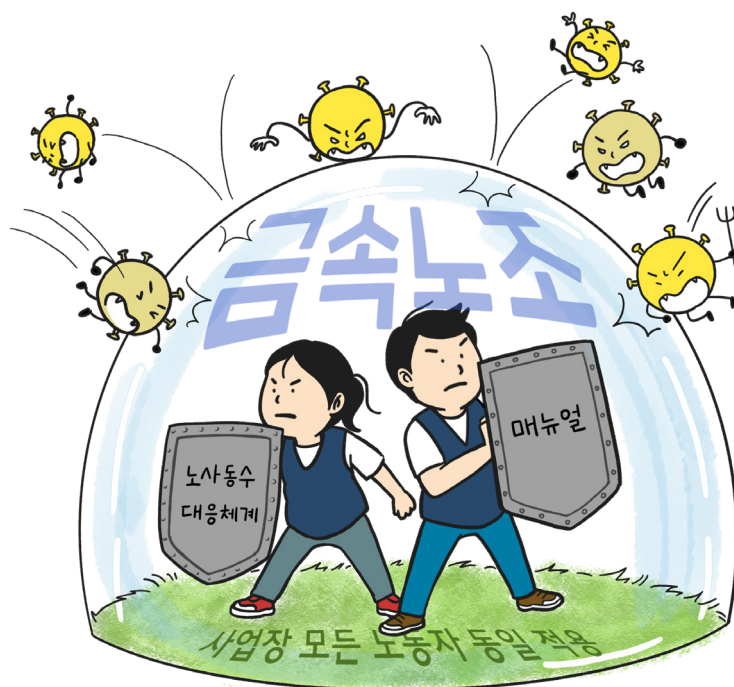
- ① 노사 동수 대응체계 및 매뉴얼 마련
- ②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적용
- ③ 사전 예방 방안 마련
- ④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 
노동자 생활 안정 방안 마련
- ⑤ 복귀 시 불이익 금지

코로나 19 확산에도 회사 측의 대응 미흡으로 많은 노동자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.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조차 **판단 기준**이 미비하여 확진자 유급휴가, 임금 지급 등에 대한 노사 간 충돌이 거듭되고 있다.

제조업 노동자들은 밀집 공간에서 일하기에 감염병 발생 시 매우 위험하다.

사스, 메르스, 코로나 19 등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.

이에 **단체협약상 감염병 예방과 노동자 보호책 마련**이 시급하다.





#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

“2021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한다.  
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.  
적용대상에 비정규직·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.”

## 2020년 기본급 인상

“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 
기본급 인상 월 120,304원을 요구한다.” (정가·호봉승급분 제외)



금속노조 2019년 사업장 임금실태 조사결과와 ▲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.3% ▲예상 물가상승률 1.0% ▲소득분배개선분 2.04%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기본급 인상 요구액을 산정하였다.

사용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앞세워 노동자 임금의 고정급 비율을 낮추고, 임금구조와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려 한다.

변동급은 영원하지 않다. 생활임금 쟁취 기초 아래 **기본급과 고정급을 더 안정적으로 확대**해 나가는데 임금교섭투쟁 방향을 맞춰 나가자.



# 교섭주기·교섭 시기 통일

“조합과 회사는 2021년 교섭 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”

- 사업장 교섭주기와 교섭 시기를 ▲**단체교섭 짝수년·임금교섭 매년 진행**  
▲**단체협약 유효기간 짝수년 3월 31일까지로 통일**
- \* 국회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(3년) 시도에 대응하고, 금속노조 교섭·투쟁 시기 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
- \* 기존 방침과 사업장 결정으로 단체교섭 매년 시행할 수 있음

# 지부·지회 간부 유급교육시간

“회사는 지부·지회 단위 간부 및 대의원에게 연 1회 2박 3일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.”

# 일터 괴롭힘 금지

- 일터 괴롭힘 내용, 판단 기준, 대응방법, 피해자 범위 (비정규직 포함), 진행절차, 예방 교육과 재발 방지 마련
- \* 업무배제, 저성과 유도 행위, 노조 탄압 → 일터 괴롭힘 해당



# 불법파견 및 용역 사용금지

“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 
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
조합원의 고용안정,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 
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.”

## 노동시간

주 40시간 기준 연장노동 12시간 제한

\* 「정부 특별연장근로확대 인가  
사유 확대」 도입 저지



## 시설편의 제공 복지사업 지원 · 출장 유급

- \*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 
「노조법상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조항」 2019년 연말 효력 소멸
- \* 2020년 단체교섭으로 단체협약상 노조 시설편의 제공과 운영비 지원 등  
확대 · 신설 · 원상회복해야!

## 노동안전 위험성 평가 · 위험의 외주화 금지

# 정년퇴직

“정년퇴직은 조합원이 국민연금을  
수급하게 되는 직전 연도의 연말까지로 한다.”

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에 따른  
소득 공백 증가로 인해 노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 
나고 있다.

또한 2019년 대법원이 “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 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가동할  
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”  
라고 판단한 바 있다. 노동 생산가능  
인구 감소 대비도 필요하다.

한편 정년연장을 핑계 삼은  
임금피크제 도입, 촉탁직  
전환 등의 꿈수는 거부해야  
마땅하다.



구분	1957-60년생	1961-64년생	1965-68년생	1969년생 이후
국민연금 수급연령	만62세	만63세	만64세	만65세

\* 1952년생 이전 : 만 60세 수급 / 1953-56년생 : 만 61세 수급

\* 1960년생 : 2020년 연말 정년

**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!**

**모든 해고 금지  
사회안전망 확대  
재벌체제 개혁 요구 내걸고!**

**금속노조 18만의 힘으로  
2020년 당당하게 돌파하자!**

